

“폭염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 취약계층 생존 위협

#일주_이슈

광주·전남 온열질환자 크게 증가
저소득 고령자 에어컨 없이 견뎌
‘통합돌봄’ 성과 거뒀지만 한계
복지사·간호사 등 처우 개선 절실
“적정비용이 지속가능 복지 견인”



광주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지구 임방울대로에서 지열로 인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폭염’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 35도를 육박하는 무더위 속, 누군가는 집 안에서 에어컨을 틀고 더위를 피해 있지만, 누군가는 창문조차 열기 어려운 낡은 공간에서 뜨거운 하루를 견뎌야 한다. 또 누군가는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워야 하며, 그늘 없는 공사 현장에서 온 몸으로 열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작업자도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광주와 전남의 온열질환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하는 현장에서 쓰러지는 빈도수 만큼이나 집에서 더위에 쓰러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주로 광주의 취약계층, 즉 저소득층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에어컨 등 냉방 시설이 부족한 주거 환경과 제한된 경제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저소득층 상당수가 만성질환 등 건강 문제를 안고 있어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매일을 보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온열질환자는 6월 한달에만 이미 26명 발생했다. 예년 같으면 한 여름인 8월에 나올 수 있다.

온열질환은 단순히 탈진이나 어지러움에서 그치지 않는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제 전체 온열질환자의 1% (지난해 3704명 중 34명 사망)가 숨지고, 그 사망자의 3분의1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다.

광주의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14만2256명 중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4만1307명에 달한다. 이들 중 일부는 생존을 위해 한낱 피약별에 리어카를 끌기도 한다. 하루 벌이 하루를 사는 이들에게 에어컨은 그야말로 ‘꿈의 물건’이다. 두암종합사회복지관 김동수 부장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보면, 여름철 필수품인 에어컨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며 “그런 분들에게는 냉

방시설이 갖춰진 사회복지관 방문을 권유하는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이들은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비주거시설 거주자들이다. 비주거시설은 모텔, 고시원 등 일반적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열악한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이곳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엌, 화장실, 목욕실 등을 단독으

로 사용할 수 없다. 광주시는 저소득층의 폭염 등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중장년 독거가구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주거 지원, 생활 돌봄 등을 통합 제공하는 복지 모델이다. 통합돌봄 정책은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광주는 통합돌봄 모델을 통해 고독사 수치를 줄였고, 통합돌봄 목표 달성률도 143%에 달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수치가 아니라, 지역 사회가 돌봄을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합돌봄이 모든 위기가구에 닿기엔 갈 길이 멀다. 현장 인력 부족 때문이다. 박 의원은 “현재 통합돌봄의 핵심 인력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인데, 임금에 비해 필요한 인력과 업무의 양은 너무 많다”며 “예산 부족, 인력 한계, 행정 실행력의 차이가 구조적 장벽이 돼 정책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넓히고 있다. 지속적인 교육과 직무 고도화, 장기 근속을 위한 구조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라는 말은 휴먼서비스 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반드시 적절한 비용과 존중이 함께 가야 지속가능한 복지가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2·3면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특검,尹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 18일만... 혐의 중대성 고려
외환혐의 제외 “조사량 많이 남아”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지난달 18일 준비기간을 마치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상의 특검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물증을 단단하게 다진 뒤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특검법상 보장된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인데 5분의 1도 채 쓰지 않은 시점에 ‘정점’을 상대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

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 조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함)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서울-김선욱 기자-연합뉴스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엔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